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균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절차가 균열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7+4'나 '7인 중립인사' 등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은 이같은 갈등이 지속될 경우 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며 사퇴를 시사해 파국이 우려되고 있다.

정중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1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 7명으로 구성하자는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정 부시장은 "시민사회와 협치모델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하지만 양 당사자간 입장차가 커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특히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 7명의 중립적인 인사와 시민모임측 2명, 광주시측 2명 등 11명으로 구성하자는 이른바 '7+4' 방식을 제시한 반면 광주시는 중립적인 인사 7명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 부시장은 "서로 대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측이 참여할 경우 진영논리에 빠져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속한 논의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시민사회와 협치모델을 만들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권익위원회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지난 10일 공론화준비위원회 7차 회의를 갖고 공론화위원회 구성방식에 합의하는 듯 했으나 광주시가 중립인사 7인 방식을 고수하면서 결렬됐다.

권익위와 시민모임은 중립적인 인사 7명을 전남대·조선대·호남대·광주대·동신대 등 5개 지역 대학과 대한변호사협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갈등관리학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6명 가운데 압축하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를 봤으나 추가로 광주시와 시민모임이 추천한 2명씩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시민모임은 대표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11인제를 고수한 반면, 광주시는 양측 이해당사자를 뺀 중립인사 7인 방식으로 맞섰다.

행정부시장 "7+4 진영논리...중립인사로 시민단체 수용 거부면 파국 장기화 우려 최영태 위원장 사퇴 시사... 혼돈 속으로"

권익위와 시민모임은 다음 8차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중립인사 7인 방식을 거듭 주장하면서 시민권익위가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재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 부시장은 "최영태 권익위원장이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재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라는 가정을 두고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민모임측이 '7+4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최영태 위원장도 갈등이 지속될 경우 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절차가 파국으로 갈 우려를 낳고 있다.

공론화 논의의 좌장역할을 해온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시민권익위원장은 그야말로 오로지 봉사하는 자리인데,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사퇴를 시사했다.

그는 "광주시가 여론조사를 하겠다면 여론조사로 정면 돌파하든지, 공론화를 하겠다면 평등하게 속의 형으로 하겠다"고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공론화 한다면 속의 형은 피하려 하니 조율이 어렵고 애초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며

"양쪽 모두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솔직히 질렸다. 민주주의에 대한 환원이 될 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2년 최초 승인·고시된 이후 16년 동안 '건설이나 백지화냐' 논란을 비롯해 운행 노선, 건설방식, 차량 형식 등을 놓고 지리한 논쟁을 벌여 현행 저상도 경전철 방식이 확정됐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구간의 41.9km 순환선을 오는 2025년까지 저상도 경전철 방식으로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민모임 측은 저상도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과다 소요된다며 즐거하게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면 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은홍 기자



추석 앞두고 판매되는 제수용품. 민족 대명절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순천여성단체, 청암대 교직원 공정수사 촉구 1인 시위

순천 여성단체들이 여성 교수 성추행과 관련해 조직적 범죄를 벌이고 있는 청암대학 교직원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순천 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성 교수 성추행과 관련해 조직적 범죄를 벌이고 있는 청암대학 교직원들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 여성인권센터 등은 지난 10일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강병운 전 총장(74)의 성추행 의혹 관련중 위증죄로 불구속기소된 마모(30) 항장파부와 진 조교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 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여성단체 등은 마씨의 위장취업을 순천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지난 5월 광주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내렸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마씨는 광양 소재 S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5000여만원을 받아갔다"며 "병백하게 횡령혐의를 저지른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시간끌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특히 이런 배경에

대해 고검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가 외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강 전 총장이 구속되자 갑작스레 청암대 부총장으로 부임한 이모씨와 김 변호사가 같은 고향 출신이어서 검찰에서 대학 사건을 계속해서 무혐의처리 하고 있다"며 "김모 전 고검장이 청암대 사건에 개입해 있다는 제보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피해 교수와 고소인, 여성단체 등은 이날 말 대검찰청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후배들 집단폭행 중학생들 덜미

전남경찰청은 11일 후배들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등)로 A(14)군 등 중학교 2학년 학생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무안군 삼향읍 한 공원에서 후배인 B(13)군 등 1학년 학생 2명을 수차례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다. B군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군 등이 지난 3일 공갈 혐의로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교내외에서 B군 등 1학년 9명을 협박, 돈을 빼앗은 혐의로 신고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목포에 있던 이들이 B군의 행방을 확인하자마자 공원에 찾아온 점으로 미뤄 보복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일행은 10여 명, 피해자 일행은 3명이었다. 실제 집단 폭행 가담자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특기법상 보복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음란 동영상 유포 사이트 운영자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몰래카메라 등 각종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4)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음란사이트 2개와 다른 음란사이트로 링크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촬영물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2만7897건을 유포하고, 해당 사이트에 각종 도박·편경·성인용품 사이트 등에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몰래카메라 동영상 등 불법 촬영한 영상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광고비 등을 노리고 이 같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인용품 판매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22개의 불법 음란사이트에 광고를 게재, 음란사이트의 주 수입원 역할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인용품 판매업자 2명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1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한 사이버성폭력범죄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시행중이다.

김정환 기자

해남 해상서 70대 문화탐방객 숨진 채 발견

70대 문화탐방객이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5분께 해남군 송지면 땅끝항 인근 해상에서 A(75)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일행과 함께 해남으로 문화탐방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저녁식사를 한 뒤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A 씨를 봤다'는 A 씨 일행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서 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상습사기)로 A(46)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텔 식당에서 6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8만원 상당의 식대와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상습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달 출소한 A 씨는 식당·택시를 이용한 뒤 계산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번 범행을 재의하고 출소 이틀 만에 전북 군산에서 2차례의 무전취식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부채 등 경영위기가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